

‘인보사 의혹’ 이웅열, 이번주 재판 시작

무허가 ‘신장유래세포’ 인보사 제조·판매 혐의
약 160억 편취…임상 위한 주식 교부 혐의 등
임상책임의사·전식약처 공무원 등 5명 재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 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태풍 북상 소식에 미리 대피한 선박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인 9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미리 대피한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다.

에 앞서 항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결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이전 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항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평소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졌던 이 전 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전에 숨겼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전 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

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이 전 회장에게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자에게 다 맡겼다”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일단 재판에 넘긴 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6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정승호 기자

평택 팽성대교 인근서 30대 중국인 변사체 발견

9일 오전 10시께 경기 평택시 팽성대교 인근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안성천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태국인 2명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A씨(31)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묘지 이전명령 어긴 60대 이행강제금 1500만원

충북 옥천군은 묘지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68)씨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산 59-1번지 일원에 불특정 다수인의 묘지를 설치했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장사법 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등 위반으로 A씨에게 묘지 이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전명령을 여러차례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았다. 군은 1·2차 이전명령 위반을 포함, 1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군 관계자는 “분묘 이전 명령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택시비 내라”는 말에 기사 폭행한 7급 공무원

길을 돌아갔다면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0시 4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B(64)씨의 머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가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했다. 이후 B씨가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의를 휘둘을 때 모습 및 횟수, 가격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A씨는 단순히 B씨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자신도 모르게 방어하기 위해 휘둘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산 광암항 정박 소형어선 7척 화재

9일 오전 2시 2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 창원서부수협 냉동창고 앞 부두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소형어선 7척이 불에 탔다.

이 사고로 어선 7척과 접안 시설 일부가 화재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초 신고자인 동네 주민 A씨는 “수협 냉동창고 창문에 불꽃이 비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청암학원 교육부 감사 촉구 위한 릴레이 시위 후 기자회견 열어

청암대학교가 처한 어려움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교수노조 청암대지회’는 청암대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2인 1조가 되어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교육부의 이사승인 거부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를 결의하여 실행하였고 7월 3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청암대학교 지회(이하 ‘교수노조 청암대지회’)는 지난 6월 10일 강명운 전 총장의 불법학사 개입과 임기 만료 이사를 대신하여 족벌 친위세력으로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이사회를 채워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규탄하고 그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를 알게 된 순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청암학원(청암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순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순천시장,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과 교육장에게 청암대학교가 처한 어려움과 병폐를 호

소하였으며 정상회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육부를 방문하여 탄원서와 담당국장 및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지난 9일 오전 11시에는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장인 아들을 앞세워 불법적 이사회와 파행을 주도하는 강명운 전총장에게 제동을 걸었던 3인 이사의 임기 만료에 맞추어 혐과 족근 인사 3인을 범인이사로 임명하려는 수작에 교육부가 이들의 승인 거부를 촉구하라는 기자회견으로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인근 대학의 교수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junsol@junsol.com